

원자력 확대 정책과 안전 규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시각

이 병 일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배경

지역 주민을 대리하여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원자력 비중 확대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한편 책임감을 느낀다.

원자력 비중 확대라는 논의 참여에 실제 인근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원전 주변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 구성원인 소장이 대신하게 됨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머리말

우리 사회의 지난 30년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1980년대는 탈군사화와 민주화, 1990년대는 인권 증진과 국제화, 그리고 2000년대는 정보화 및 탈권위 시대로 이

해할 수 있다.

원자력이 시작된 때를 1970년대라고 보면 정부에 의해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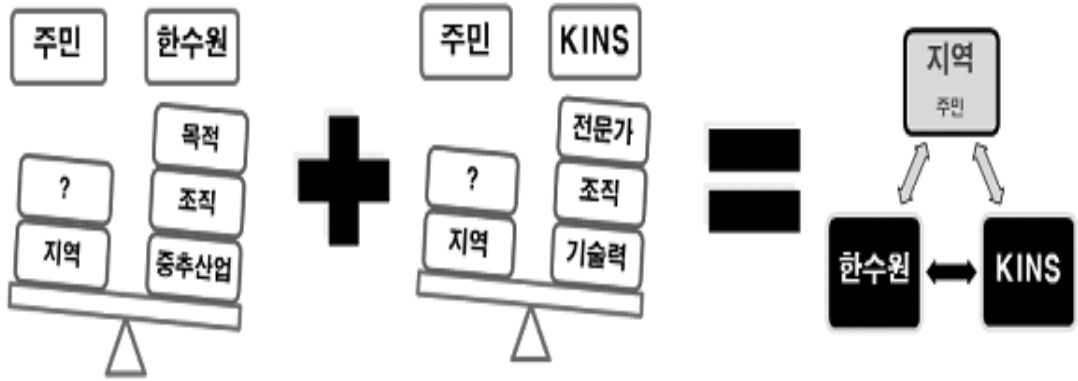
지금도 그렇지만 1970년대부터 진행된 원자력 관련 역학 구조를 보면 사업자와 규제 기관에 비하여 주민은 여러 면에서 그들과 대응하기에 매우 어려운 입장을 부정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주민 동의라는 문제를 규제 기관에서조차 인식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문제를 실현하는 데 구체적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내용이 부실하여 사업자, 규제 기관, 그리고 주민이라는 세 축을 비교할 때 지역만 있고 주민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그림 1>)

경희대 공학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전해석부 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안전해석처 연구원
지멘스 KWU 노심해석코드개발 연구원
경희대 연구조교수
월성원전환경감시기구 감시센터소장



〈그림 1〉 사업자, 규제 기관, 그리고 주민이라는 세 축의 비교

원자력 비중의 확대를 논하기에 앞서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감시기구가 지역 주민을 완벽히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대표 인사가 위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감시위원회와 작은 조직이지만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시센터로 구성됨을 볼 때 지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들 감시기구의 원자력에 대한 기본 시각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감시기구의 원자력에 대한 기본 이해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이제 원자력은 현실적으로 생활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원전 주변 주민은 서로 마찰을 최소화 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합리적 공생의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의 순서는 먼저 정부의 원자력 비중확대의 근거, 그 구체적인 출발이 되는 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님비 현상의 고찰과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를 학술적 설명과 경험을 빌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 원자력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제적 문제를 열거하고 관련된 요소로서 지역 보상과 안전성향상을 설명하고 이들의 실질적 실현에 장애는 없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자력 비중확대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현장에서 느낀 주민 의식을 통해 원자력 비중 확대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마무리 부분으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 입장에서의 기대하는 바를 열거하고 약 10년 전부터 지역민을 대표하여 원전 주변 환경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온 지역의 감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들의 의미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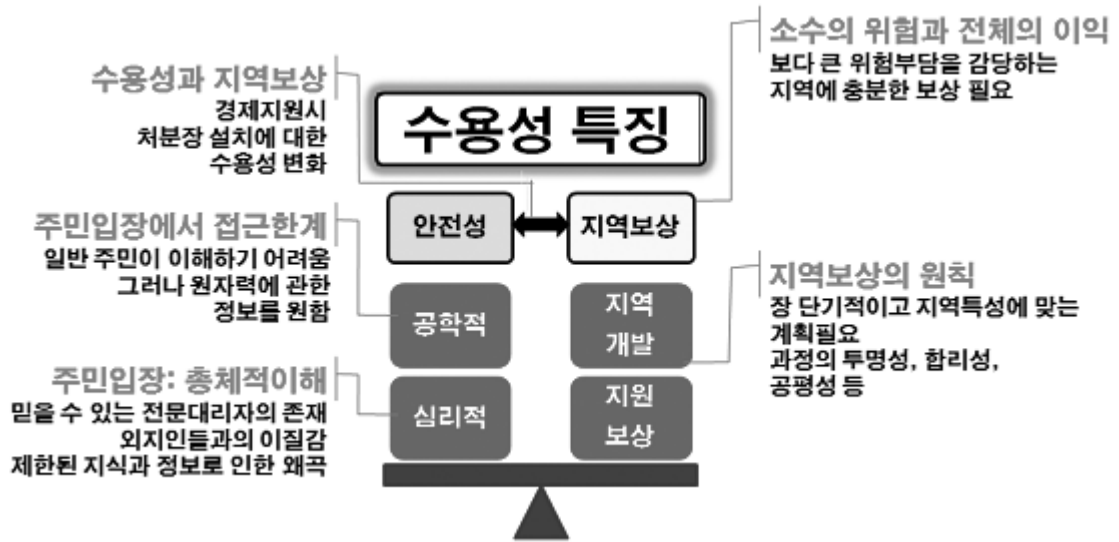
정부의 원자력 비중확대를 논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의 큰 축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참석한 건설적인 이 자리에 감시기구가 포함되는데 대하여 지역민과 타 감시기구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고백하고 원자력 확대 정책과 안전 규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시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하여 국가의 생존 원동력인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정부에서는 유가 상승, 온실가스 배출 제한, 에너지 안보, 전력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앞으로 2030년까지 최대 11기 원전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민과 밀접한 문제는 구체적인 부지 선정(확대)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 비중 확대가 전 국민적 공감감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지역의 누군가는 그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개요



<그림 2> 주민수용성의 이해

원전의 추가 건설에 대한 견해를 보면 약 80%의 국민이 적극 추진 또는 추진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나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사실이다.

요약하면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나 일종의 낯비 현상에 의해 부지선정(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미해결된 채 진행된 사업은 운영과정에서도 역시 어려움이 전파되고 또 다른 원자력사업에 어려움으로 옮겨진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제 주민 수용성(낯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열거하고 그 속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주민 수용성의 이해

원자력 주민 수용성을 요소로 크게 나누어 보면 주민이 느끼는 안전성과 지역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2>)

이들 두 요소는 다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안전성도 공학적 안전성과 심리적 안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징으로는 전자의 경우 관련 정보를 원하는 반면에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주변 상황의 총체적인 상황으로부터 인지되어 느껴지는 안전성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 여부, 사업자와 규제자 모두 외지인이라는 이질감, 원자력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정보로부터의 믿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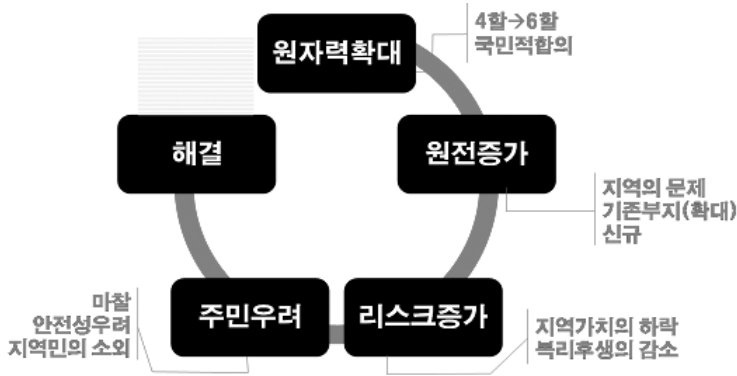
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 보상 문제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장·단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된 후 전개 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 등이 설득력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안전성 확보 측면을 학술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과학은 실험실에서 대중과 사회의 의견이 배제되고 과학자들만의 이해와 공용으로 국가의 지원

그림 2. 주민수용성의 이해
혹은 산업화로 이루어진 프로세스라면 앞으로의 과학은 과학자들뿐 아니라 주민과 이해 집단이 포함된 확장된 공동체의 문제로 발



〈그림 3〉 원자력 확대 실체와 주민 입장

전되고 타협, 대화, 그리고 설득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 과학의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하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의 일이지만 광우병 사태와 촛불 시위를 경험한 우리로서 그 논리를 부정하기 힘들다. 즉 이제는 과학과 시민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주민의 지역 보상 요구 역시 여러 학자에 의해 학술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원전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 보상 문제 제기가 극단적 이기주의 또는 무지한 주민의 요구 정도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원하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타 지역보다 큰 불안과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 인가를 모두 같이 생

각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해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에 적당한 보상을 통해 경제적 책임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학술적 근거를 빌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원자력 비중 확대에 따른 지역의 입장

원자력 비중이 확대 되는 경우 주민에게 다가오는 실제적 문제를 생각해보면 지역에 신규원전(증가)이 건설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리스크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가치와 복리 후생의 감소로 주민 우려에 의한 마찰, 안전성 우려, 그리고 지역민의 소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사업자와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림 3〉)

좀 더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주

민의 신뢰와 안심을 위해 안전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지역민의 자치 의식 제고와 정보화에 따른 사회 참여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원자력을 이해하기에는 주민의 지식과 상식은 크게 못 미치며 실질적으로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셈이며 또 그들의 입장에서 원자력을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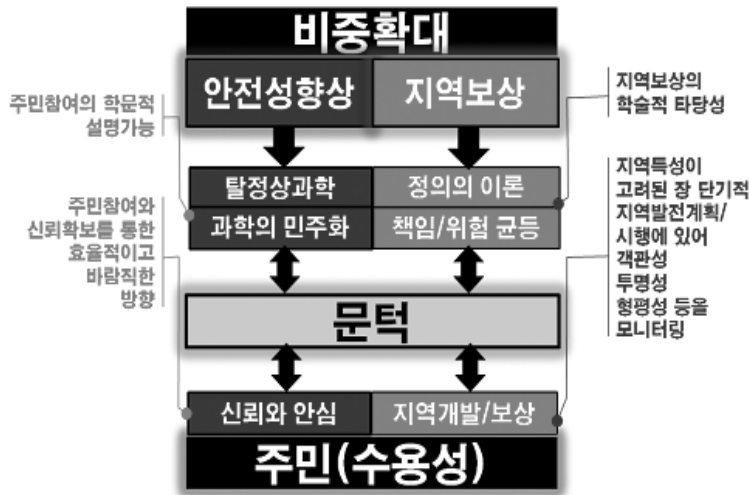
지역 보상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보상을 요구할 때 본질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보상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전락하기도 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 보상의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의 부족으로 그 나머지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주민 수용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문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감시기구 입장에서도 입장은 일부 다르지만 유사한 범주로 이해될 수 있는 장벽의 예는 또 있다.

이제 감시기구의 성격을 언급하고 그들에 대한 한수원과 안전기술원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한수원과 안전기술원의 대주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시기구는 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구성되고 운영보조비는 산



〈그림 4〉 안전성향상과 지역보상이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업경제부(지금의 지식경제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결과 감시기구의 시대적 역할의 한계와 운영상의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감시기구가 한수원과 안전기술원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월성감시기구에서는 일정 시간의 액체 폐기물 방출 밸브의 운전 이력(수시로 방출)과 시료 채취 시점(1회/1주)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그 불일치를 확인하고 액체폐기물 방출시 해수의 방사능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다수의 시료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감시기구 운영 지침을 근거로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 시점의 액체 폐기물

방출 밸브 운전 이력의 데이터, 기타 인허가 관련 기술적 자료 및 논의 요청 등을 지연 혹은 거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자료 요청에 일관된 무대응은 아니지만 정작 감시기구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공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안전기술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성감시기구에서는 여러 원자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기술원의 안전 규제 플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책임자 초청을 요청하였으나 책임자 방문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는데 재차 공문 발송을 요청하고도 약 3주가 넘게 소요되었고, 경주의 신월성원전의 잠재 지진 규모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시기구에서 수행한 독립 검토 결과 요약이 포함된 논의 요청

서를 보냈으나 역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생활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의 의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주민의 입장에서 활동하며 그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이해하려는 입장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는 그 느낌의 깊이와 고민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지역의 주인이면서 안방을 내어준 주민의 소외된 마음이며 그것을 위안해 줄 제도적 장치의 빈약함과 내용의 빈곤을 확인하곤 한다.

먼저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요 시설인 원자력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원자력 지식의 한계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진실한 대응에 대리 만족과 심리적 안심을 갖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이후 지역의 전문가를 인정하고 스스로 안전 문제는 일임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편안해진다.

왜 한수원과 안전기술원의 전문가들에게는 그러한 느낌이 약한 것

일까?

기본적으로 한수원은 전력 생산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이 명확한 대기업이며, 안전기술원 역시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규제라는 전문가 조직으로서 그 존재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은 비전문적이며 비조직적으로서 그들의 설명과 일방적인 대응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셈이다.

이제 원자력 비중 확대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 문제들의 양적증가와 단순한 다양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혀 새로운 문제의 발생 또는 원자력 비중 확대에 따른 주민의 반응과 불안감이 단순한 원전의 호기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할 것인가, 아니면 증폭될 것인가? 원자력 관련 기관들 입장에서 매우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민의 기대

원자력 확대에 따른 지역민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 입장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필자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민의 심적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민은 지역의 실제 거주자이며 주민입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지역의 큰 변화에서

소외되었다.

조금 과장하자면 지역만 있고 주민은 없는 상황이며 이 또한 너무 오래 지속되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큰 변화에 있어 주변자로의 기간이 지속되어 지역으로부터 심리적 간격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자와 규제 기관은 주민 편과 다른 나머지들의 한 무리 정도로 인식하고 엄정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더욱이 주민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사업자는 사업적 최소 필요만큼의 기술적 행정적 활동 외에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에는 소홀하고 그 누구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대해 섭섭함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소외되고 상처받은 지역민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사업자와 규제 기관은 그 역할이 법적으로 명백하나 지역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 대책이 부실하며 내용도 미비하다.

규제 기관의 업무 특성상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매우 곤란하며 이익 창출이 목적인 사업자는 요구가 없는 지원을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이 둘의 조직과 주민 사이에는 처음부터 커다란 장벽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장벽을 없애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

주민 모두 원자력 전문가가 되고 지역 지원을 투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수 있겠는가?

주민이 원자력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장벽을 극복하는 길은 다리를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주민은 삶의 터전에서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는 극심한 소외감의 극복이며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며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한 출발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주민 거주지역 인근에서 문턱이 높은 사업자와 규제 기관 혹은 정부를 상대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의 존재를 기대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감시기구의 역할과 주변 환경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사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력(현 한수원)이 영광 5/6호기 인허가를 획득한 후 영광 군청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획득할 즈음 참조 발전소인 영광 3/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이 있었고 영광군(지역 주민)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건설허가를 불허하였다.

이후 한국전력은 주민 스스로 원전 주변 환경의 방사능 감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조건으로 건설 허가를 획득하였다.

감시기구의 현황은 1998년에 고리감시기구 운영을 시작으로 1999년에 영광, 2003년에 울진, 2006년에 신고리, 그리고 경주의 원전감시기구는 작년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5개 원전지역에 각각 감시시구가 운영되고 있다.

원전감시기구의 역할은 첫째, 주민을 대리하여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고, 둘째, 사업자와 주민의 중간자로서 상호 신뢰의 출발이 되는 의사 소통로의 역할을 하며, 셋째, 원자력 관련 주변 단체(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부, 시민 단체 등)와의 협조 및 보완 역할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원자력 관련 정보를 정확히 주민에게 전달하여 원전 관련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 감시 및 원전 안전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작게는 지역 발전과 크게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실제로 주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문제를 상호 신뢰의 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조직이 바로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고 볼 수 있다.

감시기구의 활동 내용(계획 포함)을 나열해보면 주민의 원전 관련 민원 사항 해결, 감시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자체 세미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처리 및 분석 절차서 자체 작성, 심포지엄(감시기구의 바람직한 방향) 개최, 감시센터 연합 조인트 세미나, 학술 활동, 주변 지역 투어 및 원자력 인식 조사, 액체 폐기물 방출 시기와 시료채취 시점 불일치에 대한 평가, 한수원의 잠재지진 규모에 평가에 대한 독립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민원 관련 내용으로는 원전 앞바다에 황도띠 발생 건, 원전 건설관련 콜드 조인트 발생 건, 그리고 원전 부지내의 산업 폐기물 다량 발견 건 등이며 이때 감시기구에서는 신속히 관련자료와 전문가 의견 참조 및 방사능 측정 등을 통해 각각의 민원에 대하여 감시센터에서 자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건설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주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제 감시기구의 법적 근거와 역할적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중간자로서 또 주민을 대리하여 사업자와 규제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사업자와 규제 기관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관련이 깊으며 규제 기관 관련법에 의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사업과 규제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실질적 주인이

지식경제부(정부)이고 감시기구의 지원 근거법이 지식경제부의 법인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와 감시기구의 관계는 비독립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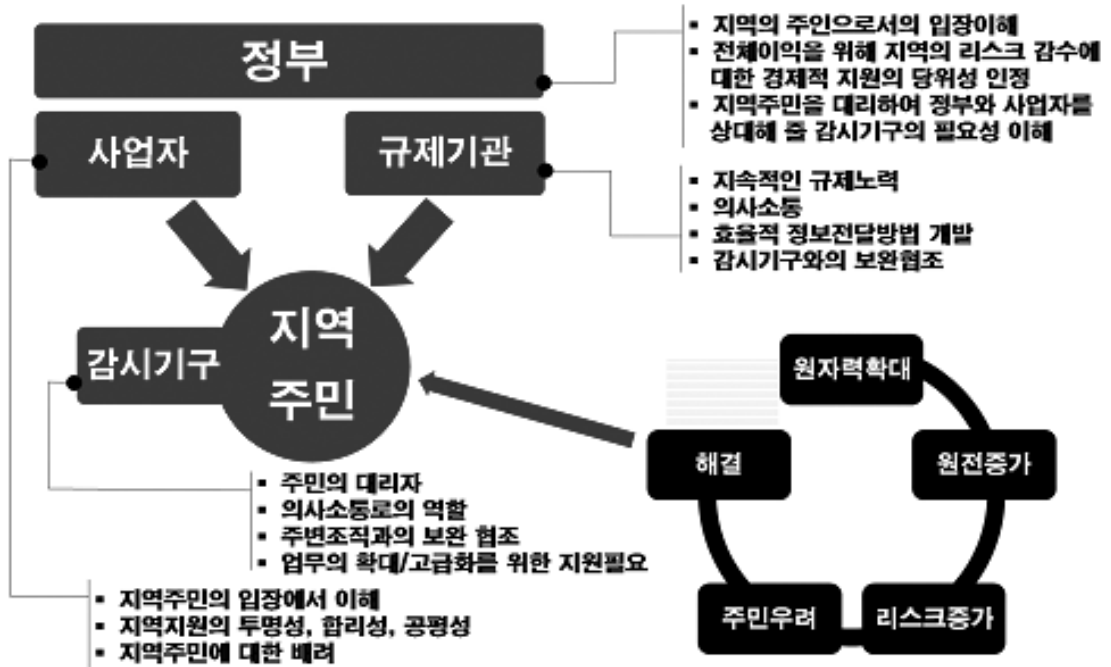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사업자와 규제 기관의 관계는 강력한 법으로 규정되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반면, 사업자와 감시기구와의 관계는 무책임이며 아무 권한도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시기구는 법적 근거와 위상, 그리고 지원이 빈약하여 결과도 빈약해지기 쉬운 어려운 처지임을 알 수 있다.

또 한수원은 전력기술원, 발전기술원, 전력기술주식회사, 핵연료주식회사 등 막대한 자회사 또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며 안전기술원은 약 350명 이상의 전문연구원(책임, 선임 포함)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관이다.

이에 비하여 감시기구는 대한민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에 작은 조직으로서 고립된 섬으로 이해되거나 지리적으로도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으며 성격상 외부에서 접근하기에 매우 민감한 조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감시기구는 변화되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주변 관련 조직과의 보완과 협조를 통해 활동 철학과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여 스스로 발전하여 미래를 창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5〉 원자력비중확대에 대한 주민기대

요약

원자력은 이제 더 이상 사업자와 규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균형에 있어 주민의 입장은 매우 열악)이 포함된 세 개의 큰 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은 지역의 주인으로 남아 안전성 확보와 지역지원을 기대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와 규제 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입장의 주민에게 원자력 비중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지역지원을 통한 주민 수용성 달성은 현실적 문턱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능력, 배려, 친화, 의

사소통 등이 가능한 고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자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런 중간자는 지역에 위치하며 주민과 관련 기관과의 다리 역할을 통해 수용성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시기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10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측면이 강하여 시대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다 건설적인 활동과 관련 조직과의 역할 보완 및 협조를 통해 작게는 지역 발전 크게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역할과 법적 근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

이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전체 이익을 위해 지역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역민을 대리하여 사업자와 규제기관을 상대해 줄 중간자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사업자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원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이 포함된 계획과 실현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규제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의사 소통과 정보 전달 방법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마음이 주민에게 전달되어야만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규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